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

대법 양형위, 전날 117차 회의서 확정

범행취약 피해자 '제자·부하·신도' 사례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 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선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간 3년6개월~6년 ▲가치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강간 2년6개월~4년 ▲가치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강간 2년6개월~5년 ▲가치 4~7년으로 바꿨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의 경우 과거 정조관념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 이용한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도 바뀌었다. 기존

에는 명시적으로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 때문에 삭제됐다.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했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잠작사유에 있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바꾸면서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특별감경인자 중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외하며,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일반감경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고, 처벌전력에 관한 조건은 강화했

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였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이 밖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을 다시 분류했다. 범이 바뀌어 각 범죄들 간 법정형의 차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9년과 2020년 각각 신설된 13~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죄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범죄의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공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의 경우에는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완도소방,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교육 훈련 실시

완도소방서는 관내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생활안전순찰대, 곡성군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과 협업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119생활안전순찰대가 곡성군 입면 대장 마을을 방문해 곡성군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과 협업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해경교육원, 이달의 BEST 교수 실무행정학과 김성완 교수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1일 오전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베스트 교수로 선정된 실무행정학과 김성완 교수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양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은행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한전KDN과 범죄예방 업무협약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4일 경찰서 2층 영산마루(소회의실)에서 한전 KDN 감사실(상임감사 정성학)과 '범죄예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주 광산구, '함께 나눠요' 송정1동, 마을 공유공간 '활짝'

광주 광산구 송정1동에 나눔으로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를 키워나갈 거점이 지난 6월 28일 문을 열었다.

임형택기자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줄속 처리'...고용부에 이의제기"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민주노총 "수용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나선다. 2019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범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줄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인상률은 18.9%다. 최근의 고물가 속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다.

물론 이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차 수정안 1만340원(12.9%)→2차 수정안 1만90원(10.1%)→3차 수정안 1만80원(10.0%)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해왔지만, 노동계는 1만원선을 계속 사수했다.

하지만 노사가 각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고,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5.0%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맡는다. 민주노총은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산출된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산식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산식을 써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을 뿐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노사 간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 근거 등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의미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산식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이라며 "이에 대입하는 것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범정시한 준수를 이유로 심의를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을

지켜 처리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전제가 있다.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돼야 한다"며 "특히 고시시한(8월5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줄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오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는 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이의제기 요청에 나서는 것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근로자위원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하면서 이번 이의제기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줄속 심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 간 사는 책임져야 한다"며 "고용부는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그에 따른 재심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비기자



내년기관차 판매 금지 촉구 퍼포먼스 하는 그린피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신주 케이블선 철거 하던 40대 직원 추락사

고흥에서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 선을 철거하던 40대 직원이 추락해 숨졌다.

5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6분께 고흥군 도양읍 청년농촌보급자리 임대주택 사업지 주변 전신주에서 케이블 선 철거 작업을 하던 A(41)씨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허리에 차고 있던 안전벨트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회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